

이슈브리프

ISSUE BRIEF

발행일 2017년 9월 11일

- 
- I. 文정부의 3%성장률 목표, 非현실적인 경제포퓰리즘
 - II. 잔혹한 소년범죄 처벌 강화 논쟁

이슈브리프

2017. 9. 11

- I. 文정부의 3%성장률 목표, 非현실적인 경제포퓰리즘 / 1
- II. 잔혹한 소년범죄 처벌 강화 논쟁 / 7

〈이슈브리프〉는 각종 현안이슈에 대한 분석과 전망, 대응방안 등을 제시함으로써 정책에 대한 이해를 돕고 의정활동에 참고·활용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보고서의 내용은 자유한국당과 여의도연구원의 공식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I. 文정부의 3%성장률 목표, 非현실적인 경제포퓰리즘

실현이 불투명한 문재인 정부의 3% 경제성장률 전망 및 그에 근거한 세수산출, 예산안 편성 등 경제정책 추진은 서민의 부담 증가, 국가재정 악화를 초래할 수 있는 ‘경제포퓰리즘’

1.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과 경제성장률 전망

□ 소득주도 성장을 통한 임기中 경제성장률 3% 유지를 공언

○ 이른바 ‘소득주도성장’ 을 통한 분배 중심의 성장 전략 제시(7.25)

- 복지확대를 통한 재분배와 이를 통한 소득 확충이 논리의 핵심

- 소비 증가 → 생산 확대 → 투자 증가 → 일자리 확대 → 소득 증가의 선순환 성장을 통해 3%성장 능력 유지가 가능함을 주장

○ 금년뿐 아니라 내년 이후에도 경제성장률 3% 달성 가능성을 기정사실화하여 각종 정책을 추진

- 2018년도 429兆 슈퍼예산 편성 (2017년 대비 7.1% 증가)

- 임기 내 재정지출증가율 5.8% 유지, 연평균 세수증가율 6.8% 증가 전망

[표1] 최근 5년간 경제성장률 추이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3%	2.9%	3.3%	2.8%	2.8%

2. GDP 3% 성장률 유지 목표, 현실적으로 달성 곤란

□ 국내외 주요 전문연구기관 전망치 평균은 2.7%에 불과

○ 공공기관, 국회, 국제기구 및 국내외 민간연구소 등 국내외 전문연구기관 10곳에서 기 발표한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은 올해의 경우 2.5~2.9%, 2018년도는 2.3~2.9% 수준으로써 최대 2.9%를 넘지 않음

- 2017년도의 경우, 국내외 전문연구기관들에서는 2016년 말 추정치에 비해 평균적으로 약 0.2%p 상향 조정된 수정치(2.8%)를 발표했으나, 문재인 정부에서는 0.4%p나 높은 3.0%로 수정 전망

[표2] 전문연구기관 경제전망 예측

구 분	기 관 명	'17년경제성장률		'18년경제성장률
		(16년 말 추정)	(17년 현재 수정)	(17년 현재 추정)
공공기관	한국은행	2.5	2.8	2.9
	KDI	2.4	2.6	2.5
국 회	국회예산정책처	2.7	2.9	2.9
국제기구	OECD	2.6	2.6	2.8
	IMF	2.6	2.7	2.8
	아시아개발은행	2.5	2.7	2.7
외국민간	MOODY'S	2.5	2.8	2.5
	노무라	2.4	2.7	2.3
국내민간	현대경제연구원	2.3	2.5	-
	LG경제연구원	2.2	2.9	2.7
경제성장률 추정치 평균*		2.5	2.7	2.7
문재인 정부		2.6	3.0	3.0

* 정부 발표를 제외한 10개 국내외 전문연구기관 추계치 평균

- 2016년 말 추정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올해 상향 조정된 주요 배경을 보면,

- 11조 추정 효과(0.1-0.3%), 예상보다 높은 반도체 호황으로 인한 수출 증가, 설비투자 확대에 따른 경상수지 개선효과 등이 반영된 것으로 보임

○ 文정부의 올해 및 2018년도의 3%대 성장률 전망은 현실적으로 실현이 어려우며, 내년 지방선거 등을 의식한 경제포퓰리즘적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다분

- 국내외 경제전문기관들의 평균치보다 0.1%p 높은 2.8% 전망치를 발표했던 한국은행에서조차 3%성장률 달성이 어려움을 공식적으로 피력 (국회(기재위) 제출 현안보고서(8.28) 참조)

- 국내외 경제전문기관들 역시 정부의 전망치에 대해 회의적이며,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낮은 2% 중반대로 하향할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

□ 3% 성장률 유지 달성을 곤란하게 하는 국내외 경제·사회적 여건

○ 정부에서는 내년도 확장예산을 통한 복지 확대, 가계 소득증가로 인한 민간소비 증가 등을 예상하지만 기대치 충족 가능성은 낮은 편임

- 최저임금 인상, 건강보험료 보장성 강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기초연금 인상 등 ‘소득주도성장’을 근간으로 한 고용·복지정책을 추진하더라도 이들의 소득확충 효과는 불분명하거나 회의적

- 고령화로 인한 평균소비성향 하락 등으로 성장의 추진력이 약화될 가능성
- 한계상황에 놓인 가계부채 상환 부담과 금리인상 요인 상존
- 노후대비용 저축증가 추세 등 구조적 요인으로 민간소비 증가세가 둔화될 전망

○ 8.2부동산 대책 및 SOC예산 20%삭감 발표 등에 따른 건설투자 침체 가능성도 정부의 3% 성장률 목표 달성을 어렵게 할 주요 요인

- 정부의 SOC예산 감소, 8.2부동산 대책 및 그 후속조치로 인한 부동산 공급시장 위축 등으로 건설투자의 빠른 감소세 예상

※ 건설투자 증가율의 경제성장률 기여도가 최근 5분기 연속 50%이상을 상회

- 건설투자가 지난 10년 평균 수준으로 감소 시, 경제성장률은 2.1%로 하락 압력 발생 (4년 간 매년 0.5% 하락 예상)

※ 현대경제연구원 「건설투자 의존형 경제구조의 문제점」 연구보고서 (7.30) 참조

○ 북핵 리스크 고조, 사드 갈등 등 성장률하락 압력 상존·강화

- 북한 리스크에 따른 국내외 투자자들의 투자심리 위축, 사드 갈등에 따른 현대차 중국공장 가동중단 등과 같은 대중 교역 조건 악화 가능성 등 경제성장률 하방 압력이 가중되는 추세

○ 미·중 무역 분쟁 격화 가능성, 한·미 FTA 재협상 등 수출 증가율 추정 변동성 증가

- 정부는 세계경제성장률 상승(2017년 3.5% → 2018년 3.6%)에 따른 수출증가 등으로 경기활성화를 예상하고 있으나, 국내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교역환경의 변화 가능성이 커지면서 성장률 하락 압력으로 작용

3. 검토의견 [당에 주는 시사점]

□ 문재인정부가 표방하는 임기 중 3% 경제성장은 실현이 어려운 경제포폴리즘

○ 현실과 괴리된 장밋빛 전망은 지방선거 등에 대비한 정치적 목표 달성 및 지지율 유지를 위한 이른바 ‘경제포폴리즘’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움

- 당초 국내외 10개 전문연구기관(평균)보다도 0.1%p 낮게 전망(2.5%)했던 정부가 국내외 경제·사회적 여건이 악화되었음에도 0.4%p나 높게 전망치를 대폭 수정(3.0%)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행태

○ 여의도연구원에서는 국내외 경제전문기관의 전망과 현재의 경제·사회 여건 고려시 올해 및 내년도 공히 2.7~2.8% 수준을 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함

□ 인위적인 서민 물가의 상승 가능성을 경계할 필요

○ 3% 성장률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될 경우 문재인 정부에서는 대국민 착시효과를 위한 인위적 물가상승을 위한 정책들을 시행할 가능성이 높음

- 문재인 정부는 임기 내 3% 경제성장을 전제하여 6.8%의 세수증가율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성장률 달성·유지가 어려울 경우 부족한 세수 확보를 위한 인위적 물가상승 유도 내지 방관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함

• 과도한 물가상승을 통한 명목성장률을 높여, 서민경제의 희생을 담보로 우리 경제가 성장하고 있다는 착시현상을 초래

○ 최저임금 인상(전년대비 15.7%인상) 등 물가인상 요인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걱정수준을 상회하는 인플레이션은 특히 서민 경제에 직접적인 타격

□ 경제성장은 분배위주의 ‘소득주도성장’ 이 아니라 혁신성장, 일자리중심 성장을 통해서만 현실적으로 가능

○ 문재인 정부의 실험적 성장정책은 국가 자원과 국민의 희생을 담보로 서민경제 불안, 중·장기적인 국가 재정 파탄으로 이어질 수 있음

- 근본적인 성장은 혁신을 통한 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에 있으며 재정투입을 통한 인위적인 성장은 지속 가능할 수 없음

[작성 : 이종인 연구위원 ☎ 02-3786-3811, 이승우 객원연구위원 ☎ 02-3786-3812]

II. 잔혹한 소년범죄 처벌 강화 논쟁

최근 ‘부산 여중생과 강릉 여고생 폭행사건’을 계기로 소년법을 폐지하고 형사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국민 여론이 높아지고 있으나, 소년법 폐지보다는 강력범죄 소년법에 대한 ‘특례조항 적용 배제’, ‘즉시 처분’ 등의 법 개정이 더 바람직하며, 소년법 ‘처벌연령 하향’, ‘처벌형량 강화’는 더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음

1. 점점 잔혹해지는 소년범죄

- 최근 부산과 강릉 등 전국 곳곳에서 또래를 무차별적으로 때린 10대들의 폭행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음
- 피투성이가 된 피해학생의 사진이 SNS에 올라오면서 국민적 공분이 더 크게 일고 있음

[표] 2013년 이후 학교폭력 적발인원 및 조치결과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7월	전체
학교폭력 적발인원	17,385명	13,268명	12,495명	12,805명	7,476명	63,429명
	구속	불구속	소년부 송치 (만14세 미만)	소년부 송치 (만14세 미만)	소년부 송치 (만14세 미만)	소년부 송치 (만14세 미만)
조치결과	649명	42,625명	5,838명	5,838명	5,838명	14,410명

자료: 경찰청이 국회 안전행정위 이재정 의원에 제출한 자료

- ‘2013년 이후 학교폭력 적발 및 조치결과’ 자료에 따르면 검거된 청소년은 약 6만3천명에 달함¹⁾

1) 학교폭력 통계에 집계되지 않는 암수(Hidden Crime)까지 포함하면 훨씬 더 많을 것이라 예상됨

- 학교폭력 사건은 가해자가 성인이 아닌 만 19세 미만 ‘청소년’이기 때문에 소년법에 따라 일반 폭력사건에 비해 상대적으로 처벌수위가 낮거나 가벼운 징계처분을 내리는 경우가 많음

2. 소년법 폐지/개정에 대한 국민적 요구 급증

○ 잔혹한 여중생 폭행사건이 알려진 직후 소년법 폐지 청원(청와대 홈페이지)에 무려 30만명이 참여

※ 현행 소년법은 반(反)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

-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 않으며, 대부분 훈방 조치되거나 보호처분만 받음
- 범죄소년(만 14세 이상)은 형사처벌을 받지만 최대 형벌수위가 20년으로 제한되고 성인과 달리 감형도 받을 수 있음

○ 현재 다수 여론은 소년법을 폐지해 소년범도 성인과 똑같이 강력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

-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의 경우 가해자가 미성숙해서 일으킬 수 있는 우발적 범죄가 아니며, 오히려 어린 나이를 이용, 소년법을 악용할 가능성이 높은 범죄라고 지적

○ 그러나 성인에 준하는 수준의 처벌을 내릴 경우 범죄자 낙인효과 (Labeling Effect) 등 부작용이 크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음

[표] 소년범죄 처벌 관련 개정안 발의 현황(발의순)

의원명	관련 법	개정안 주요 내용
이석현 의원 (민주당)	형법	-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14세→12세)
	소년법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 관한특례법	- 살인 등 특정강력범죄시 소년법 적용 배제
표창원 의원 (민주당)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 관한특례법	- 소년법에 사형 또는 무기형 선고시 형량완화 특칙 미적용 - 부정기형 선고시 형량상한 규정 미적용
하태경 의원 (바른정당)	소년법	- 적용대상 하향 (만19세→18세) - 최대유기징역형 (15년→20년)
김도읍 의원 (자유한국당)	소년법	- 촉법소년 기준연령 하향 (14세→12세)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 관한특례법	- 소년법에 사형 또는 무기형 선고시 최대 형량(15년→25년) - 소년이 특정강력범죄 2회 이상시 일반 형사사건으로 처리

3. 소년법 폐지보다는 올바른 ‘법 개정’ 이 바람직

- 다수의 전문가들은 소년법 폐지보다 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에 대한 ‘특례조항 적용 배제’, ‘즉시 처분’ 등의 소년법 개정이 범죄 예방에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
 - 살인이나 성폭행 등과 같이 강력범죄 소년범에 대해서는 특례조항 적용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으로 하되, 경범죄 소년범에 대해 보호나 선도를 하도록 한 규정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
 - 또한 소년범에 대해 처벌이 내려지기까지 약 6개월이 소요되는데, 이처럼 장기간이 경과하면 소년범에게 경각심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가능한 즉시 처분하는 것이 범죄예방에 더 효과적
- 소년범에 대한 ‘처벌연령 하향’, ‘처벌형량 강화’ 와 같은 법 개정 방향은 더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청소년이 과거 청소년보다 성숙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가 약하며, 이 시기에는 강한 처벌로 인한 범죄억제 효과가 약하기 때문
- 보다 근본적인 접근방법은 이들의 성장과정과 환경을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는 등 사전 예방에 집중할 필요가 있음
 - 처벌이 끝난 뒤에는 우리 사회구성원으로서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사후 관리도 보다 철저히 해야 할 것임

[작성: 장경수 선임연구원 ☎ 02-3786-3818]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18 한양빌딩 4층
TEL : 02. 3786. 3800 E-mail : ydi@ydiins.or.kr Website : www.ydi.or.kr